

조달청, 2026년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 뒷받침한다

-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성공적 이행과 혁신조달·AI조달·공정조달 강조
- 2026년 공공조달 정책추진을 위한 4대전략과 10대 핵심과제 본격 가동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2월 11일(목)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요 정책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과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실현을 위해 ①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②기업의 성장과 도약 지원, ③신뢰받는 공공조달 구현, ④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달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전략1】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

조달청은 지난 11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 방안’의 성공적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군에 대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

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27년에는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구매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시행된다. 부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이 자체조달 계약까지 모니터링하여 규정위반이나 부당한 조건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모든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며,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등 정책구매 비율을 상시점검·공개 한다.

* 일정기간 동안 자율구매를 중단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도록 조치

【전략2】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혁신조달 강화와 AI 산업 육성 등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집중 지원한다.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민간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AI,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한다. 특히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25년 529억원 → '26년 839억원)하고, R&D 지원 확대 및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레벨업을 유도한다.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 요건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물품가격 조사·분석, 조달 컨설팅 등 복잡한 조달절차에 AI 기술도 적용해 조달행정의 AI 대전환에 앞장선다

기술·안전·품질 기준은 엄격히 관리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합리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혁신·우수제품 심사 확대,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단품물가조정제도 확대, 물품분야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조달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략3】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불공정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조사와 함께 직권조사도 실시하고, 조사 거부기업에 과태료 부과,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 강화 등 제재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기업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브로커를 통한 무분별한 입찰 참여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조달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품질 수준을 상향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낙찰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 공사에 대한 실적 제한,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공공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군 급식류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는 보다 높은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품질점검 주기도 단축한다.

비철금속과 긴급수급조절물자 등 공공비축을 확대해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알루미늄·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은 목표재고를 '26년에 조기 확보한다. 또한 비축기지를 5개 권역 대형 창고 체계로 재편하고, 비축방식 다변화,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비축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전략4】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도 지원한다. 기후테크·탄소저감 관련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여 시범구매하고, 최소녹색기준 적용 물품을 확대한다. 또한, 기후·환경정보 표기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화 설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사회적연대경제조직 우대, 하도급 지킴이 민간개방 등 사회적 책임 조달을 구현한다.

미래 조달환경 변화에 대비해 시스템·법·제도·인력 기반도 확충한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에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과 업무연속성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조달기본법 제정과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공조달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한다.

* 본 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이 동시 운영되어 장애 시에도 중단 없이 즉시 서비스 전환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하며, “공공조달은 시장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행정인 만큼 공공조달의 책임성을 깊게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2026년도 조달청 업무추진방향

[붙임2] 2026년도 조달청 핵심 추진과제

[별첨] 2026년도 조달청 업무보고자료(전문)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성환	(042-724-7067)
		담당자	사무관	조자경	(042-724-7044)

비
전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

방
향

수요기관

- ⊕ 우수한 품질
- ⊕ 합리적 가격
- ⊕ 편리한 서비스

조달기업

- ⊕ 기업하기 좋은 시장환경
- ⊕ 다양한 성장 기회

국가경제

- ⊕ 혁신경제 견인
- ⊕ 민생활력 회복

추
진
과
제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

- 1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 조달 자율성 확대
- 2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 3 혁신조달 강화 및 공공구매 확대
- 4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 5 규제 합리화 및 공공판로를 통한 성장 지원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 6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및 건전한 경쟁 유도
- 7 모든 조달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
- 8 공공비축 기능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 9 탄소중립 등 사회적 책임 조달 구현
- 10 미래 대비 공공조달 인프라 확립

조달청 업무보고

공공조달 개혁

- ▶ 지방정부 단가계약 자율화
 - 경기·전북 / 전기전자제품군 대상 시범 실시('26)
 - 성과분석 및 추가 보완대책 마련 후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27)
- ▶ 발주 비리 등 부작용 최소화
 - 규정위반, 부당조건 등 모니터링 및 시정,
 - 수의계약 등 계약 정보 실시간 공개,
 -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중소기업 등 정책구매비율 상시 점검 및 공개

- ▶ AI 제품·서비스 조달 활성화
 - 계약요건(실적) 완화, AI 전용 심사 트랙 도입, 입찰 가점, 패스트트랙 계약
 - AI 사업의 기술평가 비중·변별력 확대, AI 분야 전문평가 도입

- ▶ 공공조달 AX 추진
 - 물품가격 조사·분석, 공사원가계산, 조달시장 진입 컨설팅 등에 AI Agent 우선 도입

AI 조달

혁신조달

- ▶ 혁신제품 발굴 및 구매 확대 '30년까지 5천개, 3조원 목표
 - 민간·지방정부·전문기관 협업으로 AI, 로봇, 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제품 집중 발굴
 - 국내 시범구매·해외 실증사업 확대 및 구매목표 비율 상향 조정

- ▶ 혁신기업의 Scale-Up 지원
 - 혁신제품 R&D 지원 확대
 - 혁신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 ▶ 불공정행위 감시·조사 강화
 - 신고·직권조사 병행, 조사거부 과태료 도입, 신고포상금 및 중대위반행위 위약금 증액

- ▶ 건전한 경쟁 유도
 - 브로커 입찰 근절(공급확약서 제출, 입찰보증금 부과 등)
 - 나라장터 쇼핑물 물품의 2단계 경쟁대상 및 경쟁기업 수 확대
 -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점유율 관리 강화

공정조달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
균형성장, 공정성장
뒷받침